

2002년도 제1차 자문회의  
보고자료

#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

2002. 2. 14.

한국개발연구원

# 《 보고 순서 》

## 「2011 비전과 과제」 추진경과

I. 주요 경제여건의 전망 .....	1
II.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평가 .....	3
1. 경제시스템 측면 .....	3
2. 성장동인 측면 .....	4
III.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 .....	7
I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	8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8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9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10
4.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	11
5.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12

— < 「2011 비전과 과제」 추진 경과 > —

- ◇ 2001년 5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Vision 2011 프로젝트」 추진 결정
- ◇ KDI를 중심으로 총괄 및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 2001년 6월 초순 KDI에서 작업지침 마련
  - 2001년 6월 중순 16개 작업반의 과제확정
  - 2001년 7~9월 36회에 걸친 쟁점별 공개토론회
    - \* 16개 분야의 경제전문가 290여명 참여
  - 2001년 9월 16개 작업반별 보고서 작성
    - \* 작업반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작성. 각 부처 공무원들도 참여
  - 2001년 10월 중간보고서 작성
  - 2001년 11월 공청회 및 지방순회토론회(5회)
  - 2001년 12월 ~ KDI에서 최종보고서 작성작업
    - \* 민간연구소, 언론인 및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정·보완
- ◇ 국민경제자문회의(2월 14일)에 상정하여 확정 예정

## I. 주요 경제여건의 전망

###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글로벌화 및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기술·지식 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

○ 우리 경제도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보다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더  
중요해지는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 8%, 90년대 6~7%에서  
향후 10년간 5% 수준으로 추정

####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

	1971~	1981~	1991~	2001~2010		2011~2020	
	1980	1990	200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잠재성장률(A)	8.4	7.6	6.8	5.2	4.5	4.0	3.2
요소투입	5.6	4.6	3.4	2.5	2.4	1.8	1.7
생산성증가(B)	2.8	3.0	3.4	2.7	2.1	2.2	1.5
B/A	33.3	39.5	50.0	51.9	46.7	55.0	46.9

자료 : KDI

주) 고성장 : 지속적인 구조개혁 및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저성장 : 구조개혁이나 기술혁신 속도가 느려 생산성 증가가 완만할 경우

### 경제의 지구촌화 현상 심화

- 뉴라운드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의 지구촌화가 가속될 전망
  - 글로벌 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

### 디지털경제의 확산

- 인터넷 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의 변화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기술혁신 경쟁이 격화되고 R&D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추진

### 동북아경제권의 성장

- 동북아가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
  - 중국경제 규모가 2015년 미국에 접근(연 7%성장 가정)
  - 남북경제협력 진척으로 우리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촉진

### 고령화사회의 전개

- 우리나라 노령층 비율이 7.2%('00년)에서 15.1%('20년)로 급증
  -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연금, 의료비지출 등 사회적 비용은 증대

---

---

## II.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평가

---

---

### 1. 경제시스템 측면

- 외환위기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개방적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
  -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감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
  -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을 제도적으로 마련
  -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의 개혁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체계적 추진
  - 정리해고의 입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4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경제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및 여론형성층**이 구조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국민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해 주는 **선도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

## 2. 성장동인 측면

### 연구혁신 능력

- 최근 한국의 R&D투자 증가속도는 OECD국가중 선두
  - 기업연구소: 1991년 1,000개소 → 2000년 5,000개소
-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지향적 운영시스템으로의 변화 필요
  - 지금까지 연구개발체제가 대학, 연구기관 등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집적화가 부진
  - IT, BT, NT 등 신기술 연구개발에서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정보화의 파급

- 1990년대 이후 IT산업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전통산업부문으로 파급속도가 완만
  - 전자상거래 등 IT화 속도를 높이려면 경영투명성 제고가 관건
  - IT 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수익성 모델도 필요

## 외국인투자(FDI) 유치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격하게 증대
  - 1998~2001년간 520억 달러를 유치하여 1997년까지의 총누계 246억 달러의 2배를 상회
- FDI는 한국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수단
  - 중국 등 주변 개도국과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 필요
  -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단순 비용지원보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우리의 숙련인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구축이 관건

##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성장 기여도가 낮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담으로 작용
  - \* 서비스의 GDP점유비(98년): 한국 49.0%('00), 미국 77.3%, 일본 62.1%
  - \* 물류비/제조업매출액('99년)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인적자원 양성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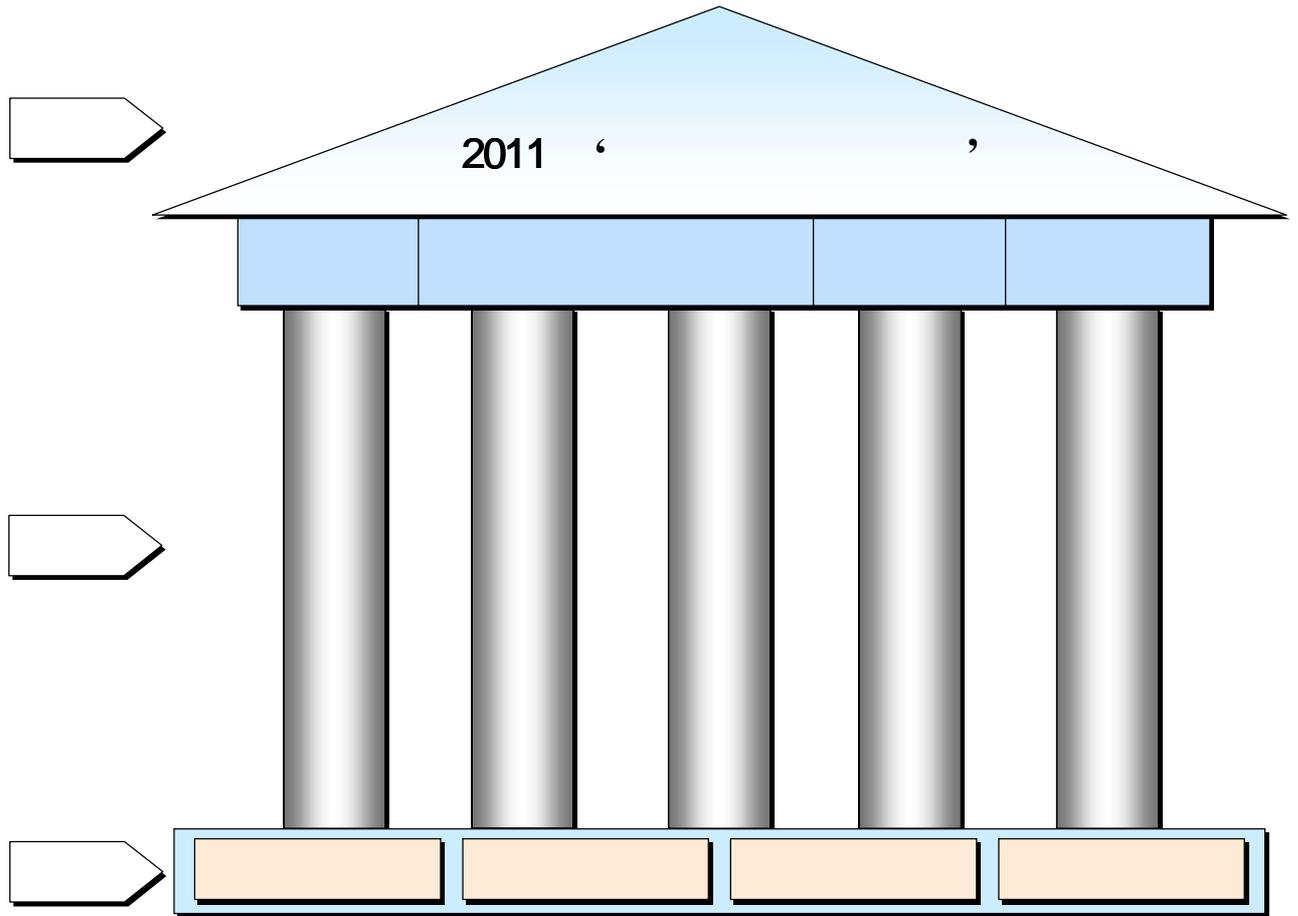
-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인력강국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 한국은 청년층(25~34세)의 학력(고졸 이상)수준면에서 세계 2위

-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계된 교육시스템이 필요
  -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제현장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
  - 중등교육에서는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되어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월성이 무시되는 문제점
  - **여성 고학력자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선진국보다 크게 미비하여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여성교육 투자를 사장시키는 결과

---

### Ⅲ.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

---



---

---

## I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

---

###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 기업경쟁 시스템의 선진화

- 경영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산
-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재벌규율이 정착되는 시스템 확립

※ 한국기업의 오랜 병폐인 연고주의 및 청탁문화를 쇠신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신뢰하고 제휴할 수 있는 기업문화 구축

####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

※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중국보다 안정성있고 경쟁력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 경제거점화의 발판 마련

#### □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 정규직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훈련체제를 강화

※ 한국의 노동문화가 경직적이고 투쟁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일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 재정개혁 및 정부 등 공공부문의 혁신

-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한국의 관료사회가 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국제적 신뢰 구축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분권화·개방화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의 배양

- 중앙보다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발전체제 구축
  - 중앙은 IT, BT, NT 등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지방은 **지방국립대학** 등과 협력하여 인력양성 및 산업집적화를 연계 추진
- 정부보다는 기업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 **세계적인 고급두뇌**를 참여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

-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 제고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첨단 신기술산업 차원에서 육성

- 문화, 관광 등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업 활성화

○ 전통산업과 벤처기업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 뒷받침

□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

○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제기능 중심에서 조정기능 중심으로 전환

○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되도록 학생의 선택권 확대

○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특성화 경쟁 유도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 탁아시설의 확대,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

###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부문간 자원배분의 합리화

○ 도로위주에서 철도·항만 등의 투자비중 증대

○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가격기능에 의하여 교통수요 조절

○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 수도권외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강화를 동시 추구

○ 수도권의 억제에서 오는 지방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win-win 전략을 추구

- 지방에 대기업이 입주하여야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므로 지방이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 부여

#### 4.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된 사회보장시스템의 질적 내실화 추구
  -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의 개편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농업 및 환경부문에 시장기능을 강화
  - 영농규모 확대와 관광농업, 수출농업의 활성화로 시장 개방의 확대에 대응하며 농가소득은 직접지불제도를 병행하여 보완
  - 환경친화적 자원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오염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 구축
-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인들의 문화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
- 문화의 대중화·상품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하부구조 확충

※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불친절하고 무질서하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관광문화를 선진화

## 5.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 동북아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화 추진

- 자본·기술·전문인력 등 포괄적 개방추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부품조달, 금융, 디자인, R&D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 인천공항, 제주도 등을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항공, 해운, 철도 등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도약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필요

※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는 거대 중국시장을,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